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제4편 통일·외교·안보분야

민주당의 길을 묻습니다

—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 —



민주당정책연구원은 신 지도부 출범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경제·사회·정치 및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 <정책비전과 의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I. 경제분야

5월 21일(화)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홍장표(부경대 교수) ·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II. 사회분야

5월 28일(화) 10:3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신광영(중앙대 교수)

III. 정치분야

5월 31일(금) 10:00 ~ 12: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태일(영남대 교수)

IV. 통일·외교· 안보분야

6월 3일(월) 15:00 ~ 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연철(인제대 교수)



II 축사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입니다.

오늘로 민주정책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시리즈가 벌써 마지막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3차례 진행되었던 경제·민생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의 토론회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었듯이,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의 토론회도 매우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외교는 균형을 잃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주도성은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안보의 위기는 심화되어 국민의 불안은 크기만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의 문마저 닫아버렸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유실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대화를 포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대화의 원칙’ 위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를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연철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토론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4차례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대표 김 한 길

I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10년만에 잠정 폐쇄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 국면을 남북 관계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근원을 해소하고 상호 평화적 관계를 제도화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적 자산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으로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이 추구해나가야 할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해법 마련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비전과 의제를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변재일

목 차

II 축사

II 인사말

사회 : 김성곤(국회의원)

1. 발제문

-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7
- 김연철(인제대 교수)

2. 토론문

- 1)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
- 2) 김준형(한동대 교수) 51
- 3) 김흥규(성신여대 교수) 61
- 4) 백군기(국회의원) 79
- 5) 정양근(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89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김 연 철 (인제대 교수)

I. 18대 대선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 대선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 쟁점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
 - 새누리당은 10.4 정상회담에서의 북방한계선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전통적인 이념공세를 취했음
 - 10.4 합의의 서해평화협력 지대 구상은 북방한계선 유지를 기반으로 취해진 것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거듭하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상회담 대화록을 논란으로 제기했음
 - 이념공세를 통해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정치적 평가를 회피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상이 갖는 추상성과 구체성의 결여라는 단점을 덮을 수 있었음
 - 이에 비해 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새누리당의 이념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했음
 - 이명박 정부 5년이 가져온 남북관계 악화와 이 과정이 초래한 국민의 보수화가 미래담론의 설득력을 약화시킨 측면도 적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평화 담론의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임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목표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문재인 후보는 평화체제에 관해 평화체제의 과정에서 잠정적 과정으로 종전선언을 제의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 안철수 후보는 평화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평화체제와 북핵문제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
 - 박근혜 후보는 대체로 한반도 평화에 관해 추상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보다는 안보를 중시했음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 관계를 핵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
 - 박근혜 후보는 남북관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고, 경제협력 의사도 밝혔지만, 북핵문제를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강조
 -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세 후보의 강조점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박근혜 후보의 안보중시와 미래지향적 평화사이에는 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야권 주자들 역시 안보를 중시하면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
- 대선국면에서 민주당의 안보정책은 목표와 추진 방안 모두 나름대로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 가능함.
- 문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대신 회피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상대방에 의해 반복되었다는 점임.

- MB정부의 실정으로서 ① 위협 감소 대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위협을 키웠고 ② 국방비 감소(재정증가율 대비)를 통해 대응전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③ 과거에 만들어진 위기관리체제를 형해화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위협 감소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군사억제력 정예화, 국가위기관리체제 정립을 들고, 이를 반복적 메시지로 전달했어야 함.

II.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비전

1. 상황인식

-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G2 시대가 도래했으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노골적인 대미편중 외교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불균형이 점차 현실로 대두
 -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협력하든, 갈등하든 우리의 이익은 침해받기 쉽고 우리 외교는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
 - 미중 갈등의 경우 : 한미군사동맹 강화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가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
 - 미중 공조의 경우 : 북한문제등 한반도 현안이 양국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
 - 미중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느냐가 최대의 전략적 목표

□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대결 시대로 복귀

-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당국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무능 정권
 - 박정희 정부 이후 남북대화 횟수에서 꼴찌 정권이며, 그것도 대부분이 실무회담에 머무르고 있음
-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쟁점 현안들의 성과가 없음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이 상봉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지 국군포로 2가족, 납북자 2가족 상봉에 그쳤음
- 남북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으로 대한민국은 북방의 경제영토를 잃었으며, 북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동북경제권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을 싹쓸이하고, 나진항의 임차를 통해 동해 출항권을 얻었으며, 임금격차를 기반으로 북한을 생산시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음
 - 동북아 철도, 도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북방 경제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
 - 경제협력이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연계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의 상실'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임
- 노무현 정부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2005년)하고, 초기이행조치(2007년 2.13조치)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시켰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6자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음
 - 비핵개방 3000 구상(선핵폐기론)을 통해 6자 회담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했음

- 그 결과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에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핵 개발 전략을 변경하고, 핵 능력을 강화시켰음
 - 무능한 외교의 결과이며, 강화된 북한의 핵 능력 만큼, 향후 재개될 6자 회담은 그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서울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논리적 모순과 의지 부족으로 전망은 비관적
- 개성공단 중단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감정적 대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전략의 부재, 정책 조정체계의 혼선 등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서의 조정체계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2.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3대 비전

평화경제, 동북아 협력외교, 통일대비 안보태세의 구축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 평화경제 구상은 평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화가 커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 한반도 평화경제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

- 동북아 평화경제 :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동시에 한반도 경제도약의 중요한 기회의 창을 제공할 것

○ 남북경제공동체로 북방경제 시대 개막

-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 철도·도로 연결,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한반도 평화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 대륙횡단철도와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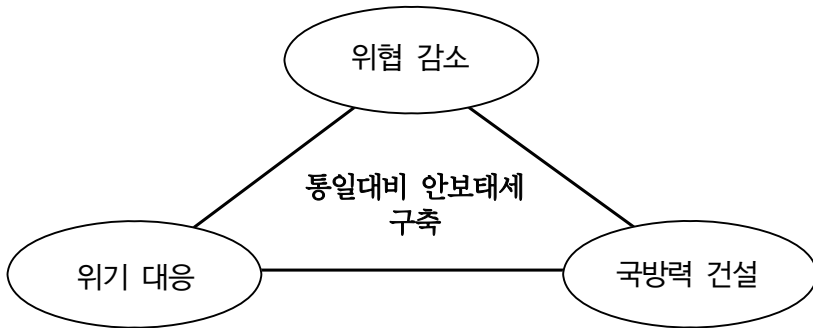
둘째, G2 시대, 동북아 협력외교 거점전략

- 동북아 전략은 한반도 전략을 지역 전략과 결합하는 것으로 서독의 동방정책이 우선적으로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서독 관계를 풀어 나갔듯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갔듯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질서를 변화시켜야 함
- 동북아 안보협력의 질적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정책의 동력이 되어야 함
-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야 됨
 -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는 지역 평화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한미 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성격전환을 하고, 6자 회담이 항구적인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위협 감소, 위기 대응, 국방 건설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 o 이는 위협 감소를 위한 대외·대북 군사안보정책,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적 정비, 미래지향적 국방력 건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III. 대북정책의 기조 및 의제

1. 대북정책의 기조

- 전환기적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더 없이 긴급

-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귀환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전환기에 진입
-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전환에 따른 불안정을 관리하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 평화협정 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의 형성을 위한 전략과 의지가 중요
 - 미국·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을 적극 지원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종식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정착
 - 비무장지대(DMZ)내 남북 휴전선 감시 초소(GP) 철수 등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를 이룩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 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를 구축하여 전쟁의 바다를 남과 북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평화와 상생의 바다로 전환

□ 무너진 안보를 재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평화체제를 뒷받침

- 군 병력은 줄이되 전력은 강화하여 싸우면 이기는 정예 강군을 건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
- 무능해진 정보력, 위기대응 실패, 안보정책혼선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보관리체계를 쇄신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북방경제로 확대발전**

-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고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 북한에 진출
- 남북경협 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
- 물류·에너지·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아우르는 환황해·환동해 경제권을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 **인도적 사안 해결과 북한인권 개선을 포괄적으로 추진**

- 인도적 사안과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하고 북한과의 인권대화도 개시
- 북한의 식량과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재건과 지역개발을 위해 협력
-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1) 북핵문제 해결 방안

□ **현황과 쟁점**

- 참여정부 시기 북한의 비핵화과정은 실질적인 행동단계에 진입

-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과제, 불능화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핵시설을 폐쇄(shutdown)
- 2008년 들어 영변 5MWe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핵시설 불능화를 진행하다가 중단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선제 핵포기 요구는 북한의 핵능력만 증강시킨 결과 초래
 - 대북압박 일변도의 강경책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확인
 -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2011년 7월과 10월, 2012년 2월 세 차례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2.29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2012년 4월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면서 합의 이행이 중단
- 한편 앞서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우라늄농축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 핵능력을 강화
- 2013년 들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북핵문제는 상호 억제력의 강화국면으로 전환
 - 박근혜 정부는 확장 억제(핵우산)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 구축을 국정과제(인수위)로 제시

□ 북핵 해법 추진방향

- 6자회담의 장기교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에게 안보·군사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초래
- o 북한 핵문제 해결을 ①북핵 불용 ②평화적 해결 ③포괄적·단계적 해결 ④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추진
- o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운반수단(즉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협상 전략의 필요성
 - 핵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와 더불어, 운반수단인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
 -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등을 통한 비군사적 용도를 충족시켜 주면서, 군사용 목적의 운반수단 기술 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o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진전된 초기 이행조치를 실시하여,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동력을 회복할 필요
 - 북한의 달라진 핵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의 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초기 협상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를 상호 진전된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과거와 달리 이른바 포괄적 관계 진전의 수준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평화정착의 구체적인 진전 여부가 핵 폐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 o 6자회담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실질적 협상을 활성화
- o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핵협상과 병행,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
 -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개시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에도 각종 회담을 통해 핵문제 진전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북핵 해결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강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방안

□ 평화체제 : 포괄 전략의 필요성

-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평화협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평화보장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정착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
 - ①남북관계 개선, ②북핵문제 해결, ③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질서 종식을 포괄하는 복합전략이 필요
- 남북관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겪으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
 - 서해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비방·중상금지 원칙도 깨졌으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합의기반도 붕괴→ 군사적 신뢰구축 수준의 후퇴
 - 북핵문제도 6자회담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도 강화되었으며, 북한이 헌법에서 핵보유를 명시할 정도로 협상 환경이 악화되었음
 - 그러나 한반도 정세 악화의 핵심 구조가 바로 불안정한 정전체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음
- 실현가능한 평화정착을 우선으로, 탈냉전 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

- 평화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지향하되, 실현 가능한 '평화상태'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확산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동북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평화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며,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

□ 종전 선언과 잠정적 평화관리 구상

○ 잠정적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

- 2007년 10.4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 종전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매우 간단(전쟁 종식 선언)하지만, 선언이 미칠 효과는 매우 큼
- 우선적으로 정전에서 종전, 정전관리체제에서 종전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함

○ 서해 평화 정착 : 2007년 10.4 합의를 적극 실천

- 서해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상징 : 정전체제의 한계이며,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의 의미
- NLL이라는 선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평화경제지대라는 면의 개념으로 접근

○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지대 구상

- 분단시대를 거치며,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 DMZ를 공단지대, 농업협력지대, 생태지대, 역사유적지대로 구분하여, Redesign

- 종전선언을 계기로 새로운 종전관리 체제를 평화협정 체결이전까지의 잠정적 평화관리 기구로 운영
 - 잠정적 평화관리기구 이행당사자는 종전선언(3자혹은 4자) 서명 당사자와 분리하여,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평화 관리 기구는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와 남북기본합의서상 군사공동위 기능을 통합, DMZ관리(남북)와 상호위협감소 조치 등(남북미)을 협의 이행
 - 평화 관리기구내에서 DMZ 관리를 비롯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고, 미국은 이를 보장
-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우선적 시행
-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한국 주도 필요성
 - 동북아 협력안보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의지 등이 매우 중요
 - 이미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황사 문제와 같은 환경협력, 조류 독감 예방 등의 보건협력, 해상 사고 공동대처 등 재난방지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
 - 쉬운 협력을 통한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경험을 쌓고, 점차적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높여가야 함
 - 6자 외무장관 회담과 같은 상층 논의와 실무그룹 회의라는 실무대화를 병행적으로 진행 할 필요

3)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전략

□ 남북경협 재개의 필요성

-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 남북간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도움
 - 남북은 상호보완적 생산요소(北 : 지하자원, 노동, 南 : 자본, 기술)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이 가능
 - 남한의 지정학적 한계(사실상 섬나라), 과도한 대외의존도 등을 개선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됨
 - 남북 경제의 규모, 수준, 산업구조, 기술 등에서의 격차는 경제교류·협력, 나아가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함
 - 북한지역에 대한 SOC 확충 등을 통해 북한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

□ 경협 분야별 추진 원칙

- 인도적 지원 분야 : 인도주의에 따라 정경분리 원칙 유지
 -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지원은 대규모 정부지원이 아니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원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민간차원의 지원은 남북 관계의 유지·발전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

○ **민간경협** : 경제성을 기준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

-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활성화
- 현재 남북 경협에서 우선적인 비교우위 분야는 농수산 협력 : 과수, 특용작물 등 기후변화에 따라 남쪽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분야들을 점차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협력전략이 모색될 필요
- 마그네사이트 등 국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정례적인 물류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광산설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

○ **개발협력** : 공익성을 기준으로 통일경제의 기반 구축

- 대북투자, 북한 경제회복, 남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에너지·철도·도로 등 기반조성 지원
- 한반도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공간적 차원과 산업간 연계를 고려
-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산업을 정상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 **추진전략** : 남북간 기합의된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효과, 국내 경제유발효과, 재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개
-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재개하여 북방 물류 시대의 환경을 조성
 -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
 -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철도 연결의 새로운 대상인 경원선(신탄리에서 평강까지 31km 미연결구간) 연결을 추진

4)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해제

- 개성공단의 위기 원인은 정경연계 정책의 결과
 - 북한은 군사훈련을 이유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음
 - 우리 정부도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경연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5.24 조치가 대표적 : 개성공단에 신규투자를 금지 하면서, 개성공단의 후발업체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출입제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도 이명박 정부고, 1단계 분양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정경연계 정책의 결과는 경제협력만 중단되고, 정치군사적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 정경분리 원칙을 남북한이 서로 약속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도 살고, 남북 경험도 살 수 있음
 - 정경분리가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민관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방식으로 정부차원의 법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1단계(330만 m²)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기 착수
 -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및 개성공단이 한미FTA 상 역외가공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 개성공단에서 정부차원의 역할과 민간차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투자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은 수익성 제고에 힘쓰는 말 그대로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함
- 5.24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며, 제재의 적정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
 - 일반적인 국제정치에서 경제제재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혹은 미국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나 군사용 물자, 혹은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한정되며, 일반 무역이나 위탁가공 등 경제협력 자체를 봉쇄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인 5.24 조치가 과연 국제사회의 일반적 경제제재와 비교했을 때, 적정성 수준, 유효기간의 설정 문제, 해제의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산가족 상봉의 동시 패키지안 필요

- 개성공단재개-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추진하여,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가 중단했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잠정중단시킨 사안이므로, 남북한이 각기 중단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동시에 재개함으로써, 새롭게 남북경제협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 인도협력 확대

□ 필요성

- ①북한 인권문제와 ②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사안(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
-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국군포로·납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 인권 문제를 북한의 고립 및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대결적 인권 정책이 아니라, 남북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적 인권정책을 추진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의 상시적 상봉추진하고, 이미 상봉한 가족의 수시상봉 및 동숙 허용, 면회소 설치 장소의 확대 추진
-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상봉·교류방식을 다양화
 - 화상상봉 확대 및 정례화, 이산가족 간 우편물·영상편지 교환 및 전화 통화 등
-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적십자회담 틀과 함께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 본격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

□ 보건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인도적 협력 확대

- 긴급한 인도적 지원부터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
 - 1단계 : 취약계층 대상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진 파견 등 긴급 인도 지원
 - 2단계 : 광역(도) 단위 의료 거점 센터 구축 및 의료진 파견
 - 3단계 : 지방(군) 단위까지 보건의료지원체계를 확대 구축
- 북한의 일부 동·리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①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② 질병예방 및 치료 ③모자보건 ④영양지원 ⑤식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전염병 공동대처, 의학교육 지원, 남북공동 질병 조사 등

IV. 외교정책의 기초 및 의제

1. 외교정책의 기초

□ 동북아 평화전략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대립구조가 남아 있고,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은 한계가 있음
 - 주변국의 군비경쟁 구도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남북한만 군축을 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동북아의 냉전 질서의 핵심에 바로 한반도가 있음
 - 동북아 안보협력의 질적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정착의 동력이 되어야 함
-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야 됨
 -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는 지역 평화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한미동맹과 충돌하지 않음
 -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는 냉전시대의 잔재인 ‘진영 외교’가 아니라, 탈냉전적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향해야 함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한미 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성격전환을 하고, 6자 회담이 항구적인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ASEAN과의 협력강화로 동아시아로 외교지형 확대

- 10개국 국가연합인 ASEAN은 선진국의 경제위기 이후 남남협력의 핵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시아경제통합에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이 부상
-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주요수출대상인 선진국(북)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개발협력 뿐 아니라 금융분야에서도 남남협력이 중요
 - 메콩강유역 개발협력(GMS)프로그램은 중국의 남하전략과 일본의 서진전략이 만나는 곳으로, 역내 국가들은 한국의 수자원, 농업, 교육 사업과 민간기업의 진출을 희망

□ 북방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제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경제권이 경제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변수로, 아시아 횡단 철도망 구상이나,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은 결국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연결될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보다는 대륙지향형인 철도를 건설해야 함
 -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며,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해야 함

- 북한을 통과하는 PNG 사업을 통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망 구축도 중요
 - 북한은 통과 국가로, 통과료는 일반적으로 현물, 즉 가스를 주는데, 한러 양국이 합의한 연간 100m³(700만톤)의 통과료는 약 7m³(60만톤)이며, 이것은 현재 북한 발전량의 20%에 해당
- 한국 경제의 미래는 대륙경제권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 중국에는 시장이 있고, 러시아에는 에너지가 있음
 -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야,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연결 됨. 가스관 연결 사업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확인해줌

□ 평화지향의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외교 강화

-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행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그에 기반하여 민주화, 인권 증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 평화유지, 개발지원, 국제기구 진출 등의 방법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세계 보편가치 구현과 국가이익 증대를 함께 도모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을 위한 외교

- 책임 있는 통상국가 : 배타적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통해 국가 간 호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 보완 전략 모색
 - 통상을 통해 축적되는 국익이 일부 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분배되도록 통상정책의 국내적 조건 보완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강화
 - 720만 해외동포 자산 활용 : 교민청 설립
 - 한류에 대한 적극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지식, 가치, 국가브랜드 등 소프트파워적 자산 활용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1) 포괄적 한미동맹의 공고화

□ 현황과 필요성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따른 미·중간 갈등가능성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말기의 과도한 무기도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불안정 요인 제고
-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FTA의 발효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군사, 외교, 경제, 사회문화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미동맹 추진 방안 : 우리의 안보이익에 기초, 한반도 방위협력을 위한 한미군사동맹의 발전

-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고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역외균형자 역할에 협력
-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성격과 운용방식을 조율

- 한반도 방위를 넘어선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한·미 안보협력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지지에 기초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재구축 방향

- 이익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맹 이익 추구
- 미중대립을 격화시키는 군사협력의 가능성 조절
- 중장기적인 동북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질서 관리자로서, 지역 평화환경 촉진자로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재설정

2) 한중관계의 확대 발전

□ 한중 관계의 지속 발전의 필요성

- 약화된 정치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전략대화를 활성화 하여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국제관계 등 포괄적 차원에서 양국간 공동이익을 추구
- 미국과 동맹을 잘 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도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기초 하에 경제, 인문, 사회 분야의 교류를 더 고도화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
-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전략 대화를 확대

□ 한중 관계 확대 발전 전략

-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북한문제 및 동북아 지역문제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추진

- 양국 간 군사교류(기 추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역사, 문화, 환경,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교류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확충

3) 한일 관계

-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가능
 - 한일 간 역사문제(종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독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현안이 되고 있음.
 - 한일 간의 정경분리의 원칙 즉, 영토 및 역사 문제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은 유지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은 사라짐.
-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

V. 안보정책의 기초 및 의제

1. 안보정책의 기초

- 그동안 한국의 보수정권(정당)이 국가안보에 더 철저하고 우선시한다는 일반의 인식이 있었으나, 사실 보수정권은 ① 보수층을 의식한 대외대결적 자세로 위협을 부추기고 ② (안보에 취약한 정권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기에) 국방투자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보에 취약함.

- 민주정권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예방에 주력하고 ② (안보에 취약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 유지에 더 유의하는 경향이 있음.
 - 김대중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위협을 감소하고 연평해전 등 위기 시 핫라인 가동 등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함.
 -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장성급군사회담 등), 과감한 국방투자과 개혁을 통해 현재 및 미래를 대비한 만반의 군사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 안보정책 기조는 위협을 감소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측면과 위협 발생시에 직접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와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측면을 결합하여 설정함.
 - 다만, 여기에 더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장차 주변국 위협 증대 등 미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능력 확보도 중요함.
 - 나아가 향후 북한 불안정사태나 남북 화해협력 이루 통일과정 진입을 고려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사역량의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 남북군사회담 제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 안보위협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간의 회담이 가장 중요함.

- 그간 남북 군사당국간에 2차례의 국방장관회담, 7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 39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이 있었으며,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양국간 충돌이 거의 없었음.
- 특히 2004년 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 및 비무장지대에서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동안 이행되다가 이명박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것이 그 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음.
- 따라서 남북군사회담의 제도화와 정기 개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곧 안보위협 감소의 요체임.

○ 통일과정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대비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통해 전쟁을 종결함과 아울러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안보위협 감소와 더불어 장차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 과업임.
-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에서의 한국의 당사자적·주도적 성격은 이미 확인돼 있으며,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보수층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진보진영 의제'이고 북한이 요구한 것이라 하여 기피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전쟁 종식과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보장조치의 채택은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곧 장차 진행될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임.

○ 적극적 위기관리와 국가위기관리기구 조정

- 현재 정부는 북한이 조성한 위기 국면에 함몰되어 이를 대처하고 관리하기에 바쁜 소극적 위기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음.

- 군 출신이 수장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 표상으로서 위기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근본에서부터 예방함과 아울러 재발 방지책을 구상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기 예방에 주력하는 적극적 위기관리 대책을 적극 수립함과 아울러 이를 외교안보기구 전반에 걸쳐 구체화할 통합적 조정기구의 조정을 위해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외교안보수석)의 통합을 요구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의 차질없는 관리

- 최근 긴장된 정세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음.
-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우리 안보가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국력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하는 필수적 요체로서 이를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됨.
- 따라서 국가안보실장 등의 연기 검토 의견에 대해 적극 비판하는 등 정치의제화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의 원칙 있는 타결을 위한 지속적 감시

- 올해 만료되는 방위비분담 합의를 앞두고 곧 새로운 분담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 국방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대한 압력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등 주도적 방위역할 수행에 비추어 주한 미군 주둔비의 무분별한 분담은 부적절하며 자칫 미군 주둔 규모의 증대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의제화하여 집중 감시하면서 예년 수준(주둔비 45% 이하)에서 타결되도록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국군 주도체제 정립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 억제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군사관리를 위해 한미동맹은 당분간 지속해야 할 안보자산임.
- 다만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넘어선 강압수단(roll back)이나 지나친 대중 견제 등 지역 불안정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우리 주도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2015년 12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과 한국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미래지향적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 북한은 한·미연합전력뿐 아니라 대남 차원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체감하고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상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우리의 입장에서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한·미연합 차원에서 적극 대비하고 실질적 방책을 발전해 나가야 함.
- 다만, 한·미연합 군사대비는 장차 이와같은 전략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발전시켜야 하며, 전임 정부부터 추진해오는 '국지도발군사대비' 부분은 1968년 이래 한국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상기 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재전환해야 할 것임.

○ 비핵평화 주도 및 지역안보 촉진자로서의 안보적 위상 정립

- 최근 북핵 사태에 따라 한국의 핵개발 또는 미국 전략핵 재도입 등 자칫 지역안정을 해치고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킬 만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미국 MD망의 전면 도입을 통해 중·러의 반발을 사는 미봉책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핵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핵평화 입장,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역안정을 고려한 우리 주도의 방어망 구축을 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지속적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을 통한 균형적 국방력 확보

- 국방개혁은 자칫 비대해지기 쉬운 국방 부분을 합리화·효율화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이며, 대부분의 국방선진국도 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우리는 2006년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유용한 방편임.
- 기존 국방개혁법의 기초에는 3군 균형발전과 군의 합동성·통합성 강화라는 원칙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과 장차 가시화할 수 있는 주변군의 안보위험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임.
- 따라서 기형적 군구조 개편을 통해 군의 균형발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의 국방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

○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구체화와 군사적 지원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지역적·다자적으로 후원하고 긴장 완화를 지속화하는 유용한 기제임.
- 9. 19 공동성명에서도 동북아 6개국 외교장관회담과 평화안보협력대화의 필요성이 합의돼 있는 만큼 장차 이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흔히 다자안보협력이 외교의 영역으로 인식되나 군사안보의 차원에서도 실질적 긴장완화 및 군사협력의 대안을 마련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방여건을 고려, 장병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 우리의 인구구조에서 장차 군입대 장정의 부족이 예상되며, 이 점에서 지원병제, 여군복무 확대 등 군복무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또한 그동안의 사회발전에 따라 군이 과거의 관행으로 장병을 억압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극력 기피되고 있으며, 이제는 군 스스로 장병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노력이 적극 요망되고 있음.
- 급여나 의료, 병영문화 혁신 등 장병 권익의 보호는 장차 군이 복무형태를 바꾸더라도 비교적 쉽게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군을 진실로 '국민의군대'로 바뀌어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전문직업주의에 입각, 군이 사회적으로 예우받는 분위기 조성

- 그동안 상무정신 전통과 군사독재의 폐해라는 극단적 경험이 있으나,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지나치게 경시되거나 우대되지 않으면서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직업군인은 전문적 직업집단으로서 임무에 합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역시에는 사회적응을 위한 충분한 준비, 퇴역후 원로로서는 그동안의 봉사에 대한 예우를 받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함.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

장 용 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문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013년 김정은 정권은 3대 오판을 통해 정세인식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노정
 - ①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건설과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겠다는 전략적 노선을 천명
 - 당분간 사실상 경제적 자력갱생을 바탕으로¹⁾ 핵보유에 집착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의 안정성 확보가 여전히 시급함을 시사
 - 특히 핵무기 전력화를 천명,²⁾ 체제안전판인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미중 간 협조체제를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전략적 입지 위축을 자초
 - ②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 몰아감으로써,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 협력의 토대를 파괴하고 해외자본유치에도 심각한 장애를 조성
 - ③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아베정권의 선거캠페인을 지원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
 - 한미일 대북압박공조를 약화시키면서 당면한 고립과 제재 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영토 및 역사문제에 더해 미국의 아시아귀환에 편승하여 동남아나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앞장 서고 있는 아베정권을 지원,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

1) 량순,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통의 힘이 있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30일.

2)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강조.

- 김정은 정권의 정세인식과 정책조정 능력 부재에 더해 향후 3대 오판의 결과가 대외관계와 경제 등에 야기할 부정적 영향과 잦은 군지도부 교체 등에서 확인되는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 구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지배연합 내의 갈등 가능성을 주목
- 북한에 대해 ①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하며 ②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하게 촉구

2. [대북정책 방향] 북한 정권 성격 변화와 ‘북한문제’ 해결 (북한국제화³⁾ 촉진)

- 핵문제나 저발전과 같은 ‘북한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정권에 기인
 - 김정은 정권은 특히 핵보유도 대국들 틈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해 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유산이자 자주권 수호의 보검이라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 적극 활용
-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에 유의
 - 정권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는 리더십이나 지배연합 교체로 가능하지만, 지배연합 내 세력관계 변화도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 촉진 가능

3) 북한 국제화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는 변화’로서 남북 간에는 평화공존상태의 제도화를 지향(박명규 외, 『북한국제화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 7-9).

4) 리동찬, “정론: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 『로동신문』, 2012년 12월 28일; “《로동신문》 핵보유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자주권수호의 보검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6일.

-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 정권의 점진적인 성격 변화인 바,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외교적(비군사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
- 대외적으로는 접촉면을 넓히면서 개방을 촉진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추진 역량과 주민들의 자조능력을 강화(empowerment)
- 목표가 불분명한 포괄적 제재는 북한 정권의 성격 변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역설적으로 정권의 성격 변화를 차단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
- 북한의 WMD개발이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제한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

3. [대외환경 조성] 비핵화와 연계된 잠정협정, 남북재래식군비통제 및 동북아핵통제

- 북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할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⁵⁾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핵군축 입장도 표명⁶⁾
- 특히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⁷⁾ 한반도가 교전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⁸⁾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⁹⁾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6) “조선대표 핵군축과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천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6일.

7) “최후 승리는 자주권 수호에 달려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지금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1일.

8) 정성일, “정론 :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로동신문」, 2013년 3월 7일.

9) 리현도, “조선반도의 정전체계유지책등은 반공화국전쟁기도의 산물,” 「로동신문」, 2013년 5월 29일.

-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 ①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재래식 군비의 열세 극복 ②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정치적 정당성 강화, 대외적으로 ③정치·군사적 자주성 확보 ④국제적 지위 강화 등
 -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의 집중적 표출(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극복할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의 일환)¹⁰⁾
- 이를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차원의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긴요¹¹⁾
 -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 유예 및 국제적 감시체계 가동(수직적 핵확산 방지)과 대외 확산 차단(수평적 핵확산 방지)에 더해 북한의 핵활동 신고와 검증체계를 수립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모색
 - 이를 위해서는 ①평화공존 제도화(평화협정 활용) ②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체제 ③동북아 차원의 핵통제체제(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추진, 북한의 핵보유 명분 해소와 실질적 평화정착 방안을 강구
 - 평화공존의 제도화 : ①평화선언(4자 또는 6자 외무장관) ②잠정협정(4자 별도 포럼, 종전 확인 + 남북 또는 남북(미) 평화관리-군비통제기구 설치) ③양자 간 현안 해결에 기초한 미북, 북일 교차승인 완성 및 평화협정체결(4자 별도 포럼, 가능할 경우)
 - 핵문제와 평화협정 연계 : ①북한의 핵활동 동결(유예)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중단(유예)과 핵 기술 및 물질 대외 이전 자제 선언 ↔ 6자회담 본격 재가동 및 평화선언 ②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검증체계 수립 ↔ 종전 또는 잠정협정 체결 + 남북 주도(운용적) 군비

10) 장용석,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2012), pp. 60-64.

11) 박명규 외, 『북한국제화 2017』, pp. 55-79.

통제 실현 +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 진전(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등) ③북한의 핵무기 폐기 ↔ 평화협정 체결(필요시) +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 출구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

-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NEA-NWFZ) : 북한의 핵포기 불가 명분 제거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실질적 해소, ‘통일한국’이 비핵국가로서 직면할 수 있는 핵관련 도전요인 사전 억제, 일본의 핵무장 원천 차단,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운용 제한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핵무기로 인한 위험 감소에 더해 NEA-NWFZ 이행·감독 기구들의 동북아안보 협력 핵심 기제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핵보유국(미·중·러)과 비핵보유국(남북, 일본, 몽골) 간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구축¹²⁾
- 대화의 틀은 기존 비핵화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되, 6자회담 틀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미북, 남북 등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을 순서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행
- 합의의 포괄성과 동시행동 원칙 등을 감안 9.19공동성명 이행 지속 강조

4. [남북경협] 북한국제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기준¹³⁾

- ① 한국의 이익 : 한국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를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 ② 북한의 경제 성장 : 이 정책은 북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③ 북한 정권의 통제력 : 북한 권력 그룹의 경제와 사회의 통제력에 대한 영향은?

12) NEA-NWFZ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의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프로젝트 참조.

13) 박명규 외, 『북한국제화 2017』, pp. 37-51.

- ④ 북한 경제체제와 사회변화 : 북한의 경제체제와 사회변화에 대한 영향은?
- ⑤ 북한 주민의 후생 :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한 영향은?
- ⑥ 북한의 시장과 무역 : 북한의 시장이나 무역에 대한 영향은?
- ⑦ 북한의 학습기회 : 북한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남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클까?
- ⑧ 북한의 외부 세계 접면 : 북한과 외부 세계의 접면을 얼마나 증대시키는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표 2〉 한국과 북한 정부 간 지원과 경험 사업의 평가

구 분	한국 이익	북한 경제 성장	북한 정권 통제 제한	북한 경제 사회 변화	북한 주민 후생	북한 시장·무역	학습 기회 외부 접면	총점
기초 소비재 지원	0	++	+	+	+++	+++	++	12
관광사업	+	+	--	--	0	0	+	-1
에너지 지원	-	+	--	-	+	--	0	-4
북한경유 가스관	+++	+	---	--	0	--	0	-3
인프라 건설	-	++	0	0	+	0	+	3
공단 확장, 신설	++	++	+	+	+++	0	++	11
교육 사업	0	+++	++	++	+++	0	+++	13
남한 내 취업, 교육	+	++	+++	+++	+++	+	+++	16
한중FTA 북한포함	+	++	++	+++	+	+	++	12

주 : 1. +++ : 대단히 긍정적, ++ : 긍정적, + : 약간 긍정적, 0 : 영향 없음, - : 약간 부정적, -- : 부정적, --- : 대단히 부정적.

2. 총점은 하나의 플러스를 1로 계산하여 총 플러스의 수를 합한 이후 마이너스의 수를 차감하여 계산

5. [북한인권]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 북한인권 문제의 탈정치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정권의 다양한 인권침해는 꾸준히 지적(인권기록 유지, 북한과의 인권대화 필요성도 제기)
- 신뢰형성과 확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의 실질적 구축에 주력하고(교육, 건강, 빈곤 탈출 등), 국제기구·단체와도 적극 협력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김준형 (한동대 교수)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회

김 준 형 (한동대 교수)

■ 한반도 위기상황 관련 각국 입장

▶ 미국

* 강경대응의 의도

- 1) 유화외교 비판의 국내여론으로 북한의 대미위협 좌시 불용
- 2) 북한의 협상과 도발의 반복 패턴 불용
- 3) 동맹국 안보 및 핵우산 재확인 및 핵무장 주장하는 한국 내 극우파 의식
- 4) 중국에 대한 시위
- 5)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및 아웃소싱 전략과 연결

* 최근 미국 내 분위기 : 협상무용론 및 전략적 인내정책의 유지 및 강화

▶ 북한

*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 권력공고화 과정 큰 차질 없이 진행 : 성공적인 권력 엘리트 장악 후 경제개혁(발전) 모색 중 & 대외적으로는 강경기조 지속

* 미사일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이후의 전략변화

-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수단으로 인식 : 자신감 및 상황인식에 따른 전략적 선택

- 핵보유 의지를 헌법과 법률로 명문화하고 비핵화회담에 불응 의지 표명
- 비대칭전략과 핵보유 : 핵무기/경제건설 병진전략
- 미중관계 활용의 공간이 유효함 인식
- 대남관계변화의 측면 : 경제지원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도
- * **북한전략변화의 의미** : 핵능력 발전(양산, 경량화, 소형화)으로 미국이나 한국으로서는 관리 가능한 위협에서 통제 불능의 위협으로의 전환점

▶ 한국

- * 박근혜의 대북정책=**Trustpolitik** (신뢰프로세스) : 억지(안보)와 대화(남북관계개선) 병행 ; 정치와 인도적 지원 분리
- * 박근혜의 대외정책=**Alignment** (균형정책) :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국들과의 CBMs ('서울 프로세스')
- * Obama의 전략적 인내정책과의 유사성 : 전략적 모호성 및 중도전략
- * **신뢰 프로세스의 문제점**
 - 1) 불신이 축적된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 2) 구체적 정책 결여
 - 3) 전제조건화의 가능성 상존
 - 4) 대화시도에 대한 국내 및 미국과 일본 보수층의 반대정서
 - 5) 대북제재국면에서의 북한신뢰 확보의 어려움

▶ 중국

- * 중국역할론 부각 : 한미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중국의 대북 설득 및 압박 주문
- * 중국의 대북인식의 변화 가능성
 - 북한도발이 미국의 아시아 rebalancing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
 - 중국 내 대북여론 악화 : 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동
 - 미국의 당근 제시
 - 그럼에도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
- * 중국의 딜레마 : 북한을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하는 상황
- * 중국 레버리지 과대평가 측면

■ 한미정상회담 평가

- 1) 원칙론 : 비핵화 원칙,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억지 원칙
- 2) 덕담론 : 예민한 이슈(원자력협정, ISD 등)는 모두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무성
- 3) 이상론 : 신뢰 & 서울프로세스 ; 북한문제 해결없이 전지구적 파트너십 논의
- 4) 안보담론 독점 & 평화담론 부재
- 5) 전형적 한미정상회담
- 6) 성과에 대한 과장

▶ 포괄적 전략동맹과 Global Partnership

- * 긍정적 측면 : 내포확장(정치/군사동맹-경제협력(FTA)-사회·문화·인적교류) & 외연확장(대북억지동맹-동북아-범세계 파트너십)
- * 부정적 측면 : 한미 양국의 동등한 동맹에 대한 인식차이 ; 한국의 부담증가와 연루위협
- * 전략개념의 오용과 왜곡 : linchpin, 글로벌 파트너십

▶ 신뢰프로세스

- * 구체적 정책 결여 : 대화를 끌어낼 유인이나 방법 부재
- * 미국의 오해불식에 중점을 둬서 선제조건화 또는 강경론으로 자리매김(?)
- * 대화의 구체적인 선제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게 공 던지기

▶ 서울 프로세스

- * 2가지 관건 : 1) 북한참여 ; 2) 미국과 중국의 지지
- *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북한포위 및 압박기구로 작동할 가능성
- * 미중의 적극 참여 없이는 기존 동북아 다자협력기구들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 *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과 함께 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구도가 효과적

■ 북한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

- * 옵션 소진의 현실에 대한 인식 : 지난 20년+ 다양한 정책 실패 : 각국의 불신 및 피로감
- * 북한의 몸값은 치솟았고, 핵포기 의사 없음 : 제재의 효과와 한계치
- * 선북한변화 조건의 수준 문제 :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다면 일단 협상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조건인가? 또는 분명한 비핵화 의사가 필요한 높은 수준의 조건인가?
- *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추진 필요 : 협상을 통해 핵기술 발전 늦추고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묶어두는 현실적 대안 모색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는 장기화 국면 진입)
- * 6자회담부활 및 다양한 대화채널 복원 필요
- * 일정부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 정전체제 & 평화체제 논의 필요 : 최근 위기는 정전체제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줌

■ 동북아 외교의 미래와 한국

▶ 동북아 역내국 지도부 교체의 특징과 함의

- * 국내정치적 조건과 상황이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
- * 대체로 기존 권력의 재집권을 통한 안정지향 추세지만, 이면에는 우경화와 민족주의 부상

- * 미국/유럽 재정위기를 필두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교체된 리더십의 지도력 시험 : 손쉬운 내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대외정책에 강성기조
- * 표면적으로는 북한문제, 내면적으로는 중국 부상문제를 두고 냉전적 진영외교의 부활조짐
- * 미중갈등여부가 동북아지형에 결정적 변수

▶ 외교전략의 Crossroads & Junctures

- * 미국 신뢰프로세스의 양날 : 대화와 억지
- * 미국 전략적 인내의 양날 : 대화와 억지
- * 미국 Pivot to Asia의 양날 : 대중봉쇄와 상호의존
- * 중국 대국외교의 양날 : 도전과 순응
- * 동북아 안보담론 vs. 평화담론

▶ 한국의 외교비전

- * 중견국가 역할론 : 성공 관건은 남북관계 개선
- * 평화 선도하는 신뢰구축자 외교 : 진영외교를 지양하고 탈냉전외교 지향
- * 균형 및 중재외교 : 중국과 미국 & 중국과 일본
- * 중국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정책 레버리지 상승 기회 활용
- * 동북아 다자외교 : 6자회담 부활과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구축
- * 공공외교의 활성화

▶ 민주당의 과제

- * 선거에서 대북정책 위주의 선거전략의 한계 노출 분석과 개선책 마련
- *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의 비판적 지지자 : 지난 대선 박근혜의 선거 전략
- * 북일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측면지원
- *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단호한 자세 표명
- * 정전체제의 한계와 평화체제 필요성 부각 : 평화체제에 대한 이념공세에 철저한 대비와 대국민 설득 작업
- * 안보담론의 홍수 속에 평화담론 주도 : 이스라엘 안보모델론 약점 부각
- * 미국의 대한국 부담전가(무기판매, MD 참여, 주둔부담금)에 대한 견제 역할
- * 시민단체 평화 운동 지원 : 1980년대 중반 유럽의 평화 및 비핵화 운동 벤치마킹
- * 대북정책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인식 탈피책 지금부터 마련
- * 미국내 Track I & II 네트워크 구축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중외교**

김 홍 규 (성신여대 교수)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중외교

김 흥 규 (성신여대 교수)

I. 총론

◆ 국가전략사과의 “정상”성 회복 필요

- 통일 중심의 국가 전략 사고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 “외교안보 통일”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함
-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수립을 왜곡하고,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데 비용요인을 강화시킴
- 외교안보전략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사고이며, 통일을 위해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임

◆ ‘냉전적인 유산을 안고 있는 민족국가체제’에서 안보문제나 통일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

- 신뢰는 접촉, 협의, 협력의 증대로 구축되지 않으며, 항상 깨어지기 쉬운 상황으로 남아 있을 것임. 지나친 낙관과 기대감은 순식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동인을 역으로 제공할 개연성도 큼.
- 한반도의 신뢰구조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미망을 버리고, ‘전쟁을 방지 하면서 안보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근간으로 하면서 점진적이고, 물적·제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관리하고, 타개를 모색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법의 채택이 필요함

- 단, 소위 극보수나 반개혁세력과의 차이는 ‘타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임

II.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1. 동북아 안보구도

- ◆ 동아시아에서 북방 vs. 남방 3각 안보구도는 이미 1972년 미중 및 중일의 반소(反蘇) 연합전선의 결성으로 해체되었음. 냉전적 이분법에 의한 분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
-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새로운 국제관계 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음
 - 미국 이미 2005년 대중정책에 대한 논쟁을 총괄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음. 첫째, 중국의 부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둘째,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세 번째, 중국 외교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많아 국제체제와 규범내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지역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 지위를 부여하였고, 전략대화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경쟁에서 전략적 헤징 정책으로 전환함.
 -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중국을 전 세계적인 이해상관자로 대우함.
 - 2009~10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미중 갈등을 거쳐, 2011년 미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

◆ 최근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임

- 향후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 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을 시도
-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였고 최근 시진핑 시기 들어 미국에 대한 역균형(counter-balancing) 정책 실시

[표 1] 변화하는 안보구도에 대한 한미중의 대응

	미국	중국	한국
군사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분산, 전략적으로 유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배치 - 오키나와 해병대 재배치(호주 다윈, 괌) - 싱가포르, 필리핀, 코코스제도 등 순환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접근/지역거부 (A2/AD) - 비대칭전력 강화 (잠수함, DF-21D, 최초의 항모) - 제1도련에서 제2도련으로 해양방어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 21세기 전략동맹 성숙화,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 확대 - 전작권 전환 이후 대비
외교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ARF, EAS 등 지역다자체제 중시 - 동맹 및 우방과의 협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다자체제 참여 확대 - 아세안에 대해서는 'divide and rule'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국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G20 정상회의, 개발원조총회, 핵안보정상회의, GGGI, GCF) -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미중 3자전략대화 추진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협상 추진 및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3 위주 접근 - 한중일 FTA 협상 개시 - RCEP 협상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바탕으로 전방위적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 한중 FTA 추진

※ 자료 출처 : 2013년 1월 19일 중국외교안보독회 이상현 발표를 수정한 것임.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중의 G2 혹은 Consortium 체제는 이미 작동

- 2011년 미중 오바마와 후진타오간의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임. 따라서 향후 미중의 합의를 벗어난 주요 사안의 현상변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 미중은 각자 그리고 미중 관계의 이해에 따라 남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것임.

-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문제의 해소보다는 관리의 차원에 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임.
- 이는 한국의 기존 한미동맹 강화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미중의 협력구도와 괴리 현상 및 한중 마찰도 더 커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새로운 동아시아 정세의 출현

◆ 아태시대의 도래와 당분간 역내 전략경쟁의 격화 및 불안정, 혼란, 불확실성 가중

- 아·태 지역은 국제질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로 역동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최근 발표한 미래전략보고서(Global Trends 2030)는 2030년이 되면 경제규모, 인구, 기술투자, 군사비를 종합해 산정한 글로벌 지배력에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세계경기 둔화 속에도 아태지역은 연 7~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장기적 역할을 할 것(pivot to Asia)임을 강조
- 한국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지축(pivot) 지점이 되고 있음. 동남아의 상황 역시 복잡적.

◆ 중국내 “강대국론”적 인식이 주류 사고로 등장

- 후진타오 시기 “발전도상국”이란 자아정체성을 탈피하여 “신흥 강대국”이란 인식이 주류 사고로 등장 <※ 김홍규의 중국의 3가지 전략사고 참조>

-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외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새로운 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론 등장

[표 2]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론	신흥강대국론
국제적 지위인식	(전통) 강대국	발전도상국	신흥강국
미국과 관계	경쟁	협력	견제적 관여(헤징)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전통 강국	지역 강국	세계적 강국
일본과 관계	적대적	협력 → 견제 및 대립	견제 → 포용 대상
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현상유지 원칙, 변화 가능성도 내포
대 한국 정책정향	비우호적	외교적 견인의 대상	기회주의적 : 적극 포용 혹은 배제
북한에 대한 인식	전통우방, 전략적 자산	문제아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의 이중성 인식
대북 정책수단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설득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
급변사태 대응	군사적 개입	신중함 속 한미와 양자적 해결 모색	다자주의 선호, 기회주의적
대표 개념	순망치한(唇亡齒寒, 완충지대), 돌돌팝인(咄咄逼人)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대유작위(大有作爲)

출처 :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의 Table 1을 기초로 추가적 내용 포함.

◆ 시진핑 시기 외교 DNA가 전환 중

-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을 전제 : 핵심 개념은 “균형”과 “신형 강대국관계”
- 시진핑 체제 중국외교의 핵심 화두는 “균형”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에 따른 對중 압박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함.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역외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시진핑 주석의 첫 해외순방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 “신형 강대국관계”의 주 대상은 미국이며, 점차 다른 강대국관계에 확대 적용 예상. 이 개념은 우선, **중국은 미국의 국제 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셋째, **상호간의 핵심이익은 존중해줄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

◆ 시진핑 시기 대한반도 정책

- 당분간 전략적인 변화보다는 전술적인 변화로 보는 편이 타당하나 **“현상변경 마이너스” 정책 정도의 변화는 고려해야 할 것**임. 북한을 다루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
- 북핵 문제가 강대국인 중국의 전략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함
-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지니고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중국과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북한문제의 온존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한중협력의 필요성 증대

◆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전은 억제

- 신형대국관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임.”
-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정부지출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추세.
- 중국의 핵전략은 Second Strike Capability를 추구하기 보다는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추구
- 중국은 SLBM의 능력 향상보다는 항공모함 추진. 이는 미국에 적어도 15~20년의 전략적 우위 공간을 제공.

◆ 일본 외교의 국내정치화와 ‘강대국 지위’ 유지 전략

- 아베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발표한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총선공약 집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군대보유를 명기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극우 성향의 공약 제시
- 자민당의 선거공약 중 심히 우려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
첫째는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비 강화, 자위대 승격을 축으로 하는 강성 안전보장 정책이고, 둘째는 교과서 개정, 근린제국조항 수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을 핵심으로 하는 퇴행적인 역사 정책이며, 셋째는 센카쿠, 독도와 관련한 초강경 영토 정책임

- 아베 자민당의 이러한 공약은 20년의 경제침체, 거대 중국에 대한 패배 의식,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혼란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의 감성에 ‘강한 국가,’ ‘주장하는 일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지를 강화하는 포퓰리즘 행태
- 이러한 정책 이면에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국력을 최대한 결집시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대중 균형 축으로서 전략적 위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개제되어 있음.
- 일본은 최근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재제국면에서도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북한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 김정은의 핵무기화 정책 성공 가능성 증대

-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핵실험 지속 및 핵무장화 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벼랑 끝 전술시도
- 북한은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핵보유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정권 유지를 위한 지원을 얻어내려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하고, 핵무장화 달성 시간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
- 국제사회 각국의 태도는 북한을 성토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대북 압박이 어려운 상황. 일본은 이미 일관된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협상전략 구사.
- 3~5년의 시간 경과 후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각국은 더 이상 대북 강경책 구사 어려울 전망. 이 경우, 중국 및 주변국들은 유화책을 중심으로 한 출구 전략으로 전환할 개연성 큼.

- 중국 외교의 DNA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증대되었음을 의미함.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속. 미중 관계가 여전히 주요 변수.

◆ 국제정치는 향후 20~30년간 무극화 혹은 다국화의 시대로 전환

- 2008~09년 세계적 금융위기 결과 중국의 급격한 국제적 지위향상과 정체성 혼란 현상
- 2010년 이후 중국내 논쟁에서 드러난 주류사고는 미국이 아직 쇠퇴한 것은 아니며, 다만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라는 인식
- 국제정치무대와 군사부문에서 미국의 우위는 상당기간 (20~3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다만 미국 CIA 보고서는 2030년경 이러한 미중 간 종합국력의 차이는 거의 균형에 도달 할 것이라 예측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50년경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3~4배에 이르게 될 것임.
-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는 지나가고 있으며, 세계는 무극화 혹은 다국화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
- 미국은 세력전이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조정해 나가려 할 것임. 한반도 문제는 이미 중국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점차 중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할 개연성이 증대. 이는 특히 지난 5월 제임스 켈리 국무장관의 방중시 그 단초를 보여준 바 있음.
- 중국 역시 기존의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 동시에 한반도 정책 3원칙(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추가하여 제4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를 공식화할 것을 고려중임.

III. 우리 안보전략 · 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

◆ 외교안보통일 문제의 비당파적 접근 필요

- 우리의 강점은 강한 경제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매력, 다양성과 창의력의 활용,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능력 등임.
- 외교안보통일 사안은 비당파적으로 국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대처해야 하면 항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소통구조를 지녀야 함.
- 우리의 체제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더 강하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중장기 동맹정책, 대외정책 방향 제시

- 한국은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한국은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 부문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현재, 청와대나, 각 정당,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에 전략부문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며, 흠대를 받고 있음. 이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중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움.

[표 3] 특정 미중관계를 전제한 주요 변수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구성

전략방향 변수	聯美通中	聯美和中	聯美協中	聯美聯中
기간	이명박 정권시기	향후 5년	향후 5~15년	향후 15~25년
미중관계	미국의 우위	미국의 군사력 우위 미중 경제력 균형	미국의 군사력 우위 중국의 경제력 우위	미중 군사력 균형 중국의 경제력 우위
국제체제	미중 갈등과 협력의 모색시기	미중 갈등/협력의 복합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미중 전략균형 및 Consortium
국제체제내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 기반위 역내 우호증진 노력. 중국과 救同存異의 모색	일변도 외교 지양 중국과 救同縮異 추구. 중견국가 협력의 모색 및 추진. 미중과 양자 전략대화 강화	중국과 협력의 심화와 동시에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중견국가 협력의 제도화. 한미중 삼자 전략대화의 추진.	동맹외교의 탈피와 다자안보체제 강화. 중견국가 협의체의 적극적 운용
북한체제 위기	한미동맹, 대일협력 공고화 및 대중/대러외교 강화	한미동맹 심화 및 대중 및 대일 협력외교 강화.	미국 및 중국과 양자협력 기반으로 삼자협력 추진. 대북 해결책 모색	미중과 전략대화 심화로 소외방지 한미중 삼자협력의 실현

◆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
- 한국의 국가이익과 북중 관계가 조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기존의 求同存異에서 求同縮異의 정책 추구.
- 한국 외교는 미국과 연대하고(聯美), 중국과 조화를 추구하며(和中), 일본과 협력하고(協日), 러시아와는 소통과 교류를 강화(交俄)하는 전략의 채택이 필수적. 현 단계에서는 대북정책의 유연성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임. 다만, 이 대치 국면에서 상호 간 원칙에 입각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존재하고, 향후에도 원칙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외교(包北)가 필요.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 준비 관련

○ 김정은의 전략 구상은 핵무기화 완성 후 협상전략과 남북문제 주도

- [약소국 외교+a 전략]을 구사. 일정정도의 재제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 미국 및 일본과 (비핵화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 안정을 위해 협상하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설 것. “가치외교” 혹은 “이데올로기” 외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입장에 입각해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임. 이를 통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려 할 것. 그러나 정권의 안정과 대강대국 관계 조절의 카드로 한국을 항상 남겨 둘 것임. 이는 필요에 따라 한국과의 갈등, 한국에 대한 공갈과 협박, 혹은 관계 개선 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약소국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자신의 생존과 입지를 최대한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임.

○ [신 햇볕정책]의 가동

- 전쟁이나 대타협에 의한 해결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북핵문제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북한문제 해결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 당장은 중국이 이미 결심한 바처럼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서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함.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병행시키면서 결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함.

- 북핵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면서도, 박정부 임기 내에 Engagement에 방점을 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과감히 대담하게 추진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잡적이고 상호 밀접히 얽히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신중하면서도 정확히 읽어 낼 필요가 있음

○ 중국과 전략 대화의 적극 추진

- 한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중국과 가장 험난하고 실질적인 게임을 진행해야 할 시간은 향후 3-4년임. 중국도 유사한 인식일 것임.
- 중국과 최고위급에서 각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전략대화 추진. 단, 주의할 것은 적정한 인물의 선정이며, 이는 파당적이거나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됨.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게임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니고 전략적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안배가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전략대화를 조망하고, 조절하면서, 정책으로 추진할 상위의 Control Tower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예, 국가안보실의 대외협력 비서관실.
- 우리 팀들 내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함. 동시에 전략대화 이후 이를 복기하는 과정 역시 중요함.

○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대비 필요

- 단기적인 전략은 북한이 실기를 하였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의 양보 및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노력이 중요함. 현 단계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전개해야 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작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연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놓을 필요는 없지만, 평화체제의 구축과정과 비핵화는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이는 중국 측과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안임.
- 한국은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미·중 양국에 의한 교차 보장방안과 추후 UN 및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이중 보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지위문제를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존재함.

○ 중국 측과 북한 위기관리 논의 모색

- 향후,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문제의 해법과 연계되어 있고 남북간 갈등, 긴장, 대립, 협력, 공작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가는 장기간의 게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돌발 사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협의를 사전에 진전시켜야 함.
- 중국의 입장이 반드시 한국의 이해와 배타적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 측과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음. 논리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중 하나는 반드시 한국일 것임. 특히 중국 군부는 더 더욱 그러한 이해를 가질 것임. 문제는 어떻게 상호간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으로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필요로 할 것임.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편: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백 군 기 (국회의원, 국방위원)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백 군 기 (국회의원, 국방위원)

1. 민주당 안보정책의 기초

(가) 내용

- 민주당은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개정을 단행함.
 - 주목할 점은 안보분야의 강령 신설임.
 - 이전 강령엔 통일과 외교분야는 있었지만, 안보분야와 관련해선 전무했던 게 사실임.
- 이번 강령 개정으로 민주당은 10년 집권경험을 기반으로 수권세력으로서 '안보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셈임.
- 개정된 강령의 주요내용은
 -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
 - 군 구조 개편을 이룸으로써 선진정예강군을 육성
 - 장병의 인권과 복지를 강조하고 병영문화 선진화
 - 전역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등임.

(나) 과제

- 이처럼 민주당이 새롭게 ‘안보강령’을 신설하고, 지난 민주정권에서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함께 안보강화에 만전을 기했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의 안보정책에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임.
- 지난 MB정부의 안보정책을 보면, 북한의 핵능력만 보강시키고, 무력도발 야기.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무능한 대응태세 보임.
- 반면 민주정권에선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한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과감한 국방투자와 개혁 추진.
- 이럼에도 민주당의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국의 보수 정당 및 정권이 만든 “보수=안보”라는 프레임에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평화담론”만 부각된 결과일 수도 있음.
-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안보불안은 가중되고 있음.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인식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과 함께 북한 및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정책을 마련,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신설된 안보강령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당 지도부가 실현할 안보정책 의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2. 안보정책의 주요 의제

(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포괄안보 구현

- 현재위협과 미래잠재위협, 비군사 위협의 대응개념 등 포괄안보의 재정립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현재의 대북전쟁수행 개념 선정시 저작권 전환,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국방개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 문민정부 20.9%, 국민의 정부 15.6% 참여정부 15.5% 이명박 정부 14.7% 등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배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先전력화 後부대개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전력보강이 선행되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병력감축 및 부대개편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테러 등 신종 안보 위협의 대비

- 사이버전등 신종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기본적으로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이버테러, 생화학무기, 기후변화, 국가간 범죄 등 신종 안보위협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사이버테러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범죄로 자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나) 균형 있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 한국군 역할 확대에 부합한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 2015년 12월의 전작권 전환이 앞으로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특히, 한미가 합의한 기본 원칙 준수는 필수적임.
 1. 한·미 상호방위조약유지
 2.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 보장
 3. 한국군 부족전력은 미측이 계속 지원
 4. 연합대비 태세 및 역지력 유지
- 전략적 전환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한·미 공동으로 전환상황 점검 및 평가하여 전투력 운용의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 전작권 전환에 따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는 작전지휘체계로의 개선 및 부족전력의 조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산정은 국방예산 증가와 연동

- 2009년~2013년 적용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올해 말 종료되므로 올해 새로운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예정임.
- 지난 5년간 한국은 연평균 8,000억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분담해 왔음.
- 우리나라는 1차 협정에 따라 1991년 처음 1,0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 하지만 1991년에서 2008년 사이 국방예산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6.9배 증가했음.

- 따라서 우리 군의 국방개혁도 예산의 한계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
이므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고려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산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실질적 신뢰 및 협력

- 11년 7월에 실시된 한·중 국방장관회담과 12년 7월 제2차 국방전략대화
에서 양국간 핫라인 개설을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설이 되지
못함.
- 국방부는 미국·일본과의 핫라인만 개설되어 있을 뿐임.
- 이번달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
들이 나오기를 기대함. 특히 한·중 국방장관의 핫라인 개설, 간부들의
인적교류(교육) 확대, 상호훈련 참관 등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한 단계
도약되기를 바람.

(다) 국군포로 귀환 대책 마련

- 6.25전쟁 이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500여명(국방부 추산)임. 올
해는 정전 60주년임.
- 국방부·통일부·외교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
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이고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
- 송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국군포로만의
‘이산가족 상봉’ 등 정전 60주년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라) 현역장병 및 가족 복지제도 개선

○ 타 부처에 비해 열악한 수당제도 보완

- 장병 복지는 전투력과 직결됨에도 군인·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의 1인당 평균 수혜금액과 군인 해외파병 수당 등은 타 부처에 비해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특히 맞춤형 복지제도 중 출산장려금 등은 국방예산의 한계로 규정대로 지급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병들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필요

-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분명히 부여해야 함.
- 그러나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를 제외하면 특별한 혜택이 없음.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의 수정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음.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더불어 복무기간 만큼의 정년연장 및 기업의 호봉 인정 등도 병행해서 검토 할 필요 있음.
- 한편, 복무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학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이수’ 제도는 대학의 협조가 미흡해서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함.

○ 전직지원반 기간 내 민간기업 연수하도록 제도 개선

- 전역 전 전직지원 기간에 기업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간기업의 연수를 기반으로 전역 후 실제 취업이 가능할 수 있음.
- 더불어 막연한 사회 진출의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음.

○ 군인 별거에 따른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

- 10회 이상의 빈번한 이사로 중·대령급의 50%가 가족과 별거중임. 가족과의 별거는 군인이라는 직업군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적 문제임.
- 가족문제가 적정수준의 군 인력획득과 원활한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별거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함.

(마) 예비역 장성 등 안보전문가 영입

- 새누리당은 8명의 예비역 장성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포진되어 있음. 이에 반해 장성 출신 민주당 의원은 두 명에 불과함.
- 민주당의 안보정책 강화를 위한 첫 번째가 안보강령 독자화라면, 두 번째는 인적보강임. 인적보강은 대표적으로 예비역 장성 등 고급지휘관 출신 인사의 영입임.
- 직업 특성상 희소성을 가진 예비역 인사들의 영입 이후에도 당에서 우대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남북경협사업자의 현황과 민주당의 정책방향**

정 양 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남북경협사업자의 현황과 민주당의 정책방향

정 양 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발제문에 대한 의견

발제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 정체되어있는 남한의 성장 동력을 극복할 수 있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활성화 시켜야함. 사실상의 섬나라와 다름없는 남한을 대륙과 연결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되어있는 남한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에도 도움 될 것.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항아리는 사례 발생시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이라면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격차를 줄이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남북경협사업자는 그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고 자부함. 1998년에는 금강산관광을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개성공단을 착공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

신뢰가 깨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협력분야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임. 남북 간의 갈등 및 대립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민주당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냄.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남북관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북경협사업자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남북경협에 있어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함.

□ 남북경협사업자 현황

1. 업체 현황

- 협력사업자 44개 업체 - 위탁가공 174개 업체 - 교역업체 404개 업체 - 기타경협 239개 업체	- 개성공단 123개 업체 - 금강산 50개 업체
	- 총 1034개 업체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1 기준.

2. 경협사업자 및 금강산지역사업자 매출 손실액

〈경협사업자 매출손실액 현황〉

(단위: 억 원)

	업 체 명	매 출 손 실 액	비 고
1	(주)두담	743	협력사업자
2	(주)산과들농수산	290	위탁가공사업자
3	씨에스글로벌	1,095	위탁가공사업자
4	서평에너지	2,714	협력사업자
5	천도	5,250	위탁가공사업자
6	노블컬렉션	14	위탁가공
7	세람통상	24	위탁가공
8	영랜드	56	위탁가공
9	태림산업	1,484	협력사업자
10	아천	1,800	협력사업자
11	국양해운	230	협력사업자
	합 계	13,700	

* 2013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조사

** 900여개 업체 중 11개 업체 표본조사

*** 달러환산 1100원

〈금강산 관광지구 업체 매출 손실〉

(단위 : 백만원)

No	구 분	매출손실액	비 고
1	현대아산	513,479	~ 2013.3월 까지
2	협력업체	220,319	~ 2013.3월 까지
합 계		733,798	

* 금강산 전체 손실액 : 2조 284억(2012년 국정감사 전병헌 의원 요구자료)

3. 남북경협중단 이후 업체 운영현황

- ‘금강산관광 중단조치’와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 사업이 중단.
- 현 정부 들어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
- 시간을 지체 할수록 경협사업자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위험성 증가와 신용도 하락으로 금리가 2배 이상 상승.
- 북측에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 자산 가치 상실.
- 선수금을 지불하고 반입을 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생겨 법정 관리에 들어감.
- 사업 중단으로 인해 거래처가 끊기고 생활에 어려움 발생.

□ 정책 건의

- 민주당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냄.
-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기를 원함.
- 남북경협사업자의 입장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정책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함.

1. 남북경협사업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 경협보험제도 정비

-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책 마련.
- 2012년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자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 이와 함께 5·24조치 이후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경협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해조사처’ 설치 추진.
-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경협보험제도 재정비(보상한도 확대 내지는 제한 철폐, 대위권 보장각서 요구 폐지, 부보율 상향 조정, 북측 지역에서의 국내 보험사 영업활동 허용 내지는 북측 보험사의 재보험 가입 의무화).

2. 민간부문을 활용한 남북관계발전 모색

-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
- 남과 북의 정권교체로 인한 남북경제교류 인력 재구성 등으로 야기되는 혼란 극복 가능.
- 정부, 국회, 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3. 남북경협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추진

- 반관반민기구 설립
-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적 대치 속에서도 양안경협을 통해 민관협치(Governance)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줌.
- 반관반민기구가 창구역할을 대행하면서 수많은 합의서와 결과물들을 도출하였고 양안관계를 경제통합단계까지 올려놓음.
- 2011년 중국의 대만 수출액은 437억 달러, 대만의 중국 수출액은 937억 달러를 기록.

4. 민관분리 원칙 속에서 남북경협 운영

- ‘양안경협’을 모델로 민관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긴장완화 모색.
- 남북경협에서의 민관분리 제도화 및 입법화.

5. (가칭)북한투자 전문펀드의 조성

- 민관매칭으로 조성하여 향후 예상되는 북한과 관련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관 매칭펀드가 벤처기업 활성화와 영화산업 진흥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점은 참고 할 만.

□ 남북경협사업자 현황 해결방안

1. 3차 대출 긴급요망

-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업체들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음.
- 협력사업자(4년 6개월), 금강산(4년 10개월), 모래업체(4년), 교역·위탁가공사업(3년),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3년)
- 5.24 조치 이후 국가에서 1·2차 특별대출과 무상지원 실시.
- 그러나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함(대출과 무상지원에서 제외).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대출요건 완화하여 모든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선수금 반입 허가

- 이미 선수금으로 지불한 물품부터라도 반입 할 수 있도록 허가.
- 선수금을 지급하고도 반입을 하지 못했던 수산물을 반입 할 수 있도록 허용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이미 기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망함.
- 선수금에 대한 물품을 반입.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 전환 모색.
- 대표적인 업체로 (주)천도(모래, 규사, 골재, 석재, 흑연, 백규석)와 (주)씨에스글로벌(강모래)이 있음.
- 선수금은 북측에서도 반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
- 통일부로부터 반입허가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입을 중단하여 자금 유동성 상실.
- 모래를 채취하였음에도 반입을 하지 못하고 방치.

3. 교역사업자의 협력사업 승인

-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도 교역사업자(위탁가공 포함)로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요망.

4. 남북경협사업자의 대북접촉 승인 완화

-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남북경협사업자의 제3국을 통한 대북 접촉 승인 완화.

5. 정부 당국자와 경협사업자 간의 대화

- 상호 간의 대화 부재
- 정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지만 탁상공론 수준
-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과 경협사업자간의 대화가 필요.

